

예비후보 등록 전후 문자 발송 선거운동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직접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를 언급하지 않아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예비후보였던 배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5년 12월15일 무렵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공직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를 전송한 경우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치고 선거사무소 개소 무렵 선거인 2만441명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예비후보 신분으로 포럼, 모임 등에 참석한 당일이나 다음날 이름을 표기해 정치적 포부를 담아 문자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 회사의) 가상계좌에 충전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치자금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목포시 선거구 민들을 상대로 64회에 걸쳐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목포시 선거구에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배씨는 또 문자를 전송한 비용 124만원을 선거운동을 드디어 지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가상계좌에 충전된 금액으로 지출하게 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같은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문자 발송 비용 1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당선을 위한 능동적 행위였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 측은 문자메시지에서 선거출마 여부 등을 직접 나타

1심 벌금 80만원 → 2심 벌금 50만원

일부 무죄 파기…“시점 비춰 선거운동”

냈는데 단순한 의례적·일상적 인사나 예비후보 등록 고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일부 문자메시지 전송과 그 비용은 의례적 안부인사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문자메시지 2만3174건만 유죄로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주춘정 기자



겨울이 오기전에…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을 일주일 앞둔 10월31일 오후 충남 공주한옥마을에서 직원들이 겨우내 온돌방에 사용할 장작을 쳐마루에 쌓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 일당 덜미

식품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법위반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등)로 고모(46)씨를 구속하고 고씨의 아내·형·누나 등 주변 3명과 공범 30명 등 총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공장을 차린 뒤 ‘일반인 취급 금지·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주재료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3만7000여명에게 90포당(한달치) 평균 22만원에 판매, 82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을 첨가, 한약을 제

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가족 3명과 째고 광주·수원·대전·성남 등지에 한약 판매 홍보 사무실을 차린 뒤 상담원 29명과 한약사 6명, 약재상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 일당이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식욕 감퇴 효과가 있으나 7개월 이상 장기복용 시 심장마비·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서울에 있는 약재상으로부터 한약 제작 주재료인 미황을 몰래 구입한 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를 섞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왔다.

고씨는 경찰에 “과거 건강원을 운영했던 식구에게 다이어트 한약 제조법을 전수받은 뒤 19개 재료를 이용했다.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일당은 세차장으로 사용했던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에서 한약을 만드는 과정에 오물을 방지하는

재판부는 “일부 문자는 배씨의 국회의원 선거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명백히 인식할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를 통해 모임 후 일부 인사를 한 것으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으로 해오던 사회활동이라고 볼 여지도 커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춘정 기자

“왜 대통령 욕해” 주민 흥기 위협 4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월31일 흥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김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전 11시40분까지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서 곁곳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흥기 26개를 보여준 뒤 농구구 2개로 같은 아파트 주민 A(55)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장애 3급인 김씨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22일 “A씨가 박 전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를 한 번풀로 경비실에 찾아와 A씨의 주거지를 물어봤으며, 이날 오전 경비실 앞을 지나던 A씨를 발견하고 옷 속에 보관 중이던 흥기를 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흥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주민들을 흥기로 위협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 창호공장 불…인명피해 없어

장성군의 한 창호 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10월31일 오전 8시32분께 장성군 동화면 모 창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1기동 1467㎡ 중 429㎡ 가량과 새시·침화 일부가 났다. 화재가 난 창고 쪽에 근로자들이 없어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날 불은 조립식 패널 구조인 창고 벽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15대 등이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이혼·당뇨합병증’ 고민 일가족 숨진 채 발견

당뇨합병증과 이혼 등으로 고민해 온 일가족 3명이 경기 파주시의 한 별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파주시 이양동의 4층짜리 별관 1층에서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이들(44)의 전 부인(4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버지 A(75)씨와 어머니 B(64)씨는 침대 위에. 아들은 침대 밑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매일 같이 술을 마셔왔고 어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주변에는 ‘비안하다. 잘하려고 했는데 안된다’는 내용의 부모 유서와 이들의 유서가 각각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자살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며 “각자의 유서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합의 하에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인 등 흥기 위협 금품 빼앗은 50대 검거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월31일 도시철도 출구와 등산로 등지에서 흥기로 행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A(53)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44분께 부산 연제구 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앞에서 B(37·여)씨를 흥기로 위협해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 날 낮 12시 30분께 부산 서구 구봉상의 한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흥기로 희생해 현금 7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Preventive Medicine 2015. 1월 호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성인건강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국가건강검진 수행률	국가건강검진 질환 발생률
42%p 감소	18%p 감소
전립선암 발생률 낮은 시장	전립선암 발생률 높은 시장

*전립선암은 혼합암이나, 미리 미리 전립선암이다.

보건복지부 | 홍보센터 129 | A-well 국민건강보험 | 고대생터 1577-1000 |